

# 崔 대행 “‘비상입법기구’ 쪽지, 계엄 당일 내용 보지 못했다”

##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 동시 출석  
崔 대행 “누군가 참고자료라며 전달  
계엄 문건으로 인자… 무시하고 안 봐”  
野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첫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을 받은 경위를 물었다.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해,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시에 출석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메모(쪽지) 작성자는 김 장관이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여기서 언급된 문건을 ‘쪽지’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상 A4 용지에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여러

장의 ‘문건’ 중 하나를 건네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불법적인 지시를 인지하고 시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문건을 건네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며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문건을)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자료라며 (문건을)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며 “그 때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이 “45년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안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하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쪽지를)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건(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질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12월3일인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하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저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했다. 한 총리는 ‘정당한 국무회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워낙 절차적, 실제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co.kr

## 개헌론 띄우는 與 “여소야대 되면 항상 탄핵”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5년 내 3% 성장 달성”

### 與 국가대개조 위한 개헌 토론회

“李 초대… 야당도 같이 논의하자”  
여소야대 국회서 정부-야당 갈등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가 권력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과, 3년 단임제 개헌 합의 후 총선 때 내각 책임제 개헌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탄핵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헌론을 띄운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단적 갈등이 반복돼 탄핵까지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대개조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야 합의에 기초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1987년도에 개헌으로 새 질서를 만들었고 그 옷을 38년 동안 입었다”며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같이 개헌 논의에 나서자도 제안한다. 어제(5일) 저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를 쓰고 초대를 했다”며 “여야가



김종인(가운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대철 현정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힘을 합치고 이 대표가 나서줘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기조연설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법특위 경제조항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재임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 붙는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국회는 다음번 집권을 위해 야당이 의석을 장악하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 균열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이 비화되고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둘 중에 하나다. 4년 중임제가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치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제는 중임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3선 개헌이 이뤄져서 민주주의 파괴가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하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50% 이상 하는 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2~3개월 내에 할 수 없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차기 대선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총선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소망을 해 봤다”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10년 내엔 4% 성장 포부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론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 본부가 성장 우선 전략으로 향후 5년 내 3% 성장, 10년 내 4%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출신인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0.7% 역성장하고 2021년엔 기저효과로 인해 4.6% 성장했으나 2022년 2.7%, 2023년 1.4%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를 기록했으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바 있다.

주형철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서 역성장하지 않기 위해 향후 5년의 골든타임에 혁신과 자본에 의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을 재정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에서 산업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로 바꾸고, 재정 정책은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 전략의 방향의 방향을 기술 기업에 놓아야 한다”며 “삼성

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을 6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래핵심 기업분야인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했던 동력은 자본과 활로를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며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BCDEF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매년 10조~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민간과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 본부장은 5년 내 경제성장률 3% 성장을 위해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 AI 테스트베드 추진 ▲문화·관광·자영업 연계한 해외 관광객 5000만 명 유치 ▲시장확대를 위한 신아시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세미나에서 “성장 과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체이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되어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전략과 산업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경제도 미래도 망쳤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